데스크시각

2020 건축학 개론

박진현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올 초, 광주일보 연재물 '문화를 품은 건축물 열전' 취재를 위해 세종시에 다녀왔다. 행정수도답게 새로 지은 오피스 빌딩과 아파트들이 즐비했다. 근래 광주 도심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도 많았다. 굳이 양쪽의 차이점을 꼽으라면 광주보다 '스케일'이 조금 작은 정도랄까. 세종시라 해서 특별한 기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전국 어디를 가도 아파트가 도시의 랜드마크인 것 같아 씁쓸했다.

한데 시내 중심부를 지나자 독특한 외관의 정부 세종청사가 눈앞에 펼쳐졌다. 하늘 높이 치솟은 고층 대신 공중의 통로로 건물과 건물을 기다랗게 이어 놓은 형태는 여타 도시에선 보기 힘든 색다른 분위기를 자아냈다. 통로 아래 도로를 지나 국무총리실 쪽으로 방향을 틀자 주변의 건축물과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세종 호수공원이 나타났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도 삼삼오오 산책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시민들로부터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호수 옆 도서관'도 인상적이었다. 책을 펼쳐 놓은 것 같은 독특한 외관의 국립 세종도서관은 지난 2013년 12월 국내 유일의 정책전문도서관을 표방하며, 지하2층 지상 4층 연면적 2만1076㎡ 규모로 건립됐다. 세종도서관 건축 디자인 공모전을 거쳐 최종 선정된 콘셉트(concept)는 '이모션 라이브러리'(Emotion Library), 즉 '감성 도서관'이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 사람이 어우러지는 소통의 장을 지향하는 공간답게 호수공원을 내부에서 즐길 수 있게 설계됐다.

무엇보다 콘서트홀을 연상케 하는 로비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열람실은 기존 도서관과는 확연히 달랐다. 특히 조망권이 가장 좋은 도서관 4층에 레스토랑을 배치한 점은 '신의 한 수'처럼 느껴졌다. 오전에 도서관으로 '출근해'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밤늦게까지 독서와 DVD 관람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원스톱 시스템'이라고나 할까. 그래서인지 도서관이라기보다는 복합문화공간에 더 가까운 이곳의 정기 회원은 무려 13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참고로 세종시 전체 인구는 34만 명이다.

세종도서관과 해양박물관

기억에 남는 건축물은 또 있다. 지난여름에 둘러본 부산의 국립해양박물관이다. 사실 '영화의 도시' 부산에는 건축학적으로 뛰어난 공공건축물이 꽤 많다. 부산 영화의전당, APEC하우스, 부산현대미술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부산다움'을 담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천혜의 푸른 바다와 빼어난 건축물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조형미는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없다.

특히 태종도 길목에 자리 잡은 국립해양박물관은 건물의 정체성과 부산의 지역성을 충실히 살려낸 '명작'이었다. 부지 4만5000㎡에 건축 연면적 2만5000㎡,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 거대한 물방울을 형상화한 건물은 '동북아 해양수도'를 표방하는 부산의 아이콘으로 손색이 없었다. 또한 관람의 시작과 끝은 물론 내부의 전시 관람 동선에서도 바다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공간 설계가 돋보였다. 이곳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된 것은 이러한 여러 요소가 작용했을 것이다.

이제 광주로 눈을 돌려 본다. 유감스럽게도 문화수도를 내걸고 있는 광주에는 도시의 이미지에 부합하는 매력적인 공공건축물이 드물다. 지난 2005년 이후 디자인비엔날레와 국제도시 디자인 포럼 등 빅 이벤트를 개최해 왔지만 지역의 공공디자인과 연계시키지 못한 탓이다. 게다가 미적 감각이 요구되는 문화시설의 경우 심의 단계에서부터 주변과의 조화로운 디자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일반 건물과 동일한 건축 심의 잣대를 적용하다 보니 '내놓을 만한' 명작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대형 건축물 심의 과정에서도 도시와 건축물의 이미지 조화는 중요한 고려 대상이 아니다. 광주의 일부 건설사들은 이런 '빈틈'을 이용해 '성냥갑 아파트'들을 찍어 내고 있다. 도시의 미래를 생각하기보다는 눈앞의 이익만 생각하는 것이다. 막대한 설계비를 들여 공공성을 담보하는 수도권 지역과는 극히 대조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월 함인선 한양대 특임교수를 총괄건축가로, 24명의 건축학과 교수 및 건축가들을 공공건축가로 위촉해 놓고도 이렇다 할 '존재감'을 보여 주지 못했다.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건립되는 '광주대표도서관' 국제설계 공모를 제외하면 총괄건축가의 '효과'를 찾아 보기 힘들다. 하지만 지난달 출범한 '제1기 광주시 건축정책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는 잿빛 거리와 색깔 없는 광주의 건축물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감을 갖게 한다. 함인선 총괄건축가가 주축이 된 위원회는 광주시 건축 분야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이다.

광주, '살기 좋은 도시' 되려면

문제는 광주시의 의지다. 제아무리 좋은 정책과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를 행정으로 풀어내지 못한다면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광주와 비슷한 시기에 총괄기획가를 선임한 부산시의 행보가 이를 반증한다. 부산시는 전담부서인 '총괄건축기획과'를 신설한 데 이어 개방직 국장을 영입한 후 광역시 최초로 '지역공공건축지원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국토교통부 주관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에서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행정상을 수상했다.

무릇 아름다운 건축물은 도시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일 뿐만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풍요롭게 한다. 특히 공공건축은 대중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제부터는 '공간 복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문화광주 시민들은 당연히 '문화적인'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쾌적한 공간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 필수 요건이다.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건축학개론'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은펜칼럼

'답정너' 유감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퇴근을 위해 주차된 차로 가서 스마트키를 눌렀더니 아무 반응이 없다. 아마도 배터리가 닳은 모양이다. 비상 시동을 걸어 귀가한 후 마트에서 배터리를 사서 갈아 끼웠다. 이제는 잘 되겠지. 어라? 차문을 개폐하는 경쾌한 신호음은 여전히 없다. 솜씨 없는 주인과 10년 넘게 함께 한지라 내상(內傷)이 만만치 않을 터, 필시 차의 감지기에 이상이 온 게 분명하겠다. 다음날 정비소에 들르니 산뜻한 청년이 살갑게 맞아 준다. "배터리를 갈았는데도 차가 반응이 없네요. 차가 나이를 먹으니 귀까지 먹었나 봐요."

시답잖은 농담에도 내색 않고 스마트키를 분해한 젊은이가 한마디 한다. "배터리를 거꾸로 끼우셨네요."

화끈 달아오르는 얼굴은 누구 책임일까? 속담에 '자기 집 두레박줄이 짧은 것은 탓하지 않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한다'고 했는데, 오랜 정분(情分)을 팽개친 채 과오는 모르쇠 잡고 차에만 문제를 떠맡겼다. 가을빛이 이제 풍요로운 열매 속으로 쌓이는 때인데, 세상을 향한 지혜보다는 쓸 데없는 확증편향이나 고벽(痼癖)만 세월의 더께로 자리를 잡았다.

문득 옛 이야기 하나가 떠오른다. 새로 부임한 원님이 고을에 효자가 있다 하여 찾아갔더니, 80세 노모가 일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게 아닌가. '효자라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분노한 원님이 효자를 잡아들여 문초했더니 효자의 말인즉, "원님,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겉으로 효자인 척하며, 남 안보는 데서는 발을 맡겼을까. 세간의 호평(好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니, 노모의 표정만 확인했어도 상황 인식을 달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효행의 방식이 하나만은 아닐 텐데 '다름'과 '틀림'을 구분 못하고 질책했으니,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고 달은 보지 못한 격이다.

이렇듯 다른 것조차 틀리다고 규정해 버리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돼)의 수렁은 생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일전에 있었던 일이다. 친구들 여럿의 한가로운 대화 속에 미국 대통령 링컨이 끼어들었다.

링컨이 변호사로 일하던 젊은 시절 이야기다. 유사한 사건 두 개를 동시에 변호하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두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과 판사가 동일했다. 오전 재판에 변호인으로 참석한 링컨은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편 끝에 피고인의 승소를 받아 내었다. 두 번째 재판은 오후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열의를 다해 원고의 입장을 두둔하였다. 의아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여 판사가 물었다. "왜 오전과 생각이 달라졌지요?"

링컨은 대답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전엔 제 판단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건 지금 제 판단이 옳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꺼낸 벗의 의도는 이랬다. 경직된 사고에 얽매이면 진실을 보지 못하는 법. 일반화된 논리를 따르지 않고 개별 사례에 담긴 상황의 차이를 읽어 내는 노력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창한 대통령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링컨 그 친구, 안되겠네!"라는 한 우인(友人)의 단언에 좌중은 순간 썰렁해졌다. 확실한 가치관도, 진실에 대한 존중도 없이 법률 지식을 악용하여 미꾸라지처럼 정의를 휘돌리는 '법꾸라지'(法+미꾸라지)라는 추가 언급은 순간에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분위기로 바꿔고 말았다.

오전과 오후의 사건 전모를 차치하고서 섣불리 링컨의 행동을 가치 판단할 수 있을까. 두 사건 모두 약자의 입장을 대변했을 개연성 또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니 확신은 잠시 접어 두고, 정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냉철하게 생각했어야 했다.

물론 가벼운 담소 자리에서 따질 일은 더더욱 아니다. 그런데 취기 탓일까. 갑자기 진영 논리 속에서 '누가 더 좋은가'가 아니라 '누가 더 나쁜가'로 비약하며 끝없는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하필 배터리가 새것이라는 사실에 매몰되었던 이는 바람 끝의 서늘함을 저어할 뿐이었다.

기 고

코로나 시대에 더욱 주목받는 세계김치연구소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

음악, 영화, 드라마와 같은 문화 한류 못지않게 글로벌화 가능성이 큰 콘텐츠가 한국의 대표 발효 건강식인 김치다. 코로나19를 맞아 김치가 면역력에 좋은 식품으로 세계인들에게 인식되면서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세계 80개국 이상에 수출되고 있다. 이처럼 김치는 음식 한류의 세계화를 이끌어 갈 가장 유망한 식품이다.

영국의 한 신문은 한국과 독일이 코로나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숫자가 적은 것이 신체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발효 식품인 김치류를 즐겨먹는 두 나라의 식생활과 연관이 있다고 기사화하였다.

이렇듯 전 세계적으로 김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김치 종주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현재 독립 연구기관으로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를 한국식품연구원과 통합하여 본원 아래에 분원 형태로 운영하려는 시도다.

세계에서 유일한 김치 관련 정부 출연 공공 연구기관인 세계김치연구소는 2008년 국무회의에서 '김치 종주국 위상 회복을 위한 전문 연구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0년 성남에 설립되어 2012년 광주김치타운 내로 이전해 운영되고 있는 유일무이의 김치 전문 공공연구소이다.

광주 이전 후 인력 확충과 연구 시설 장비 등 기반 조성을 2016년까지 마치고 김치 기능성 유산균 발굴·보급, 김치 생산 공정의 자동화 등 상당한 연구 성과를 김치 산업계 현장에서 인정받으며 본격적인 성과를 내가고 있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현재 일각에서 세계김치연구소와 통합이 논의되고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은 1987년 식품 일반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통폐합이 논의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만일 현재 독립 연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세계김치연구소가 한국식품연구원과 통합되어 그 분원으로 운영된다면 김치 연구의 자율성과 독립성 약화는 물론 김치연구소 종사자의 사기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최근에 세계김치연구소의 통합에 대해서 각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김치연구소는 물론 정부 관계 부처, 김치협회, 김치업계, 광주시 등 관련 주체 모두가 강한 반대 의견을 내놓았고 일부 기관은 통합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시위까지 하였다. 광주시는 세계 김치연구소의 통합을 반대하고 현행과 같이 독립 연구기관으로 존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문화예술, 방역, 산업은 물론 식품에서까지 한류가 세계로 확산되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따라서 한류의 대표 상품인 김치 연구의 발전 필요성이 한층 커진 현 시점은 세계김치연구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과를 높이도록 할 때이지 통폐합과 같은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모적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논의를 전기로 하여 세계김치연구소도 연구소의 존립 목적이 국내 김치 산업 발전 지원과 김치의 세계화에 있는 만큼 김치 산업계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구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연구하여 그 성과를 현장에 돌려주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광주시도 세계김치연구소와 협력하여 연구소가 김치 한류의 세계화를 이끄는 선두 기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社說

철도망 영호남 격차 해소 정치권 힘 모아야

영남과 호남의 발전 격차는 여러 분야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철도망 역시 그러하다. 호남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호남고속철도 1단계는 경부고속철도보다 11년 늦은 지난 2015년 개통했다. 이제야 설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 송정~목포)도 2025년 개통 예정이어서 경부선과 비교하면 15년이나 차이가 난다.

경남 밀양 삼랑진역과 광주 송정역을 잇는 경전선 역시 낙후된 호남의 상황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삼랑진~순천 구간은 복선 전철이지만 순천~광주 구간은 단선 비전철이어서 열차가 경남을 지나 전남 구간에 들어서면 갑자기 느림보가 된다. 다행히 지난해 전남 구간 전철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오는 2025년까지 공사가 진행되지만 복선화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남해안철도 역시 경남은 광양~진주와 진주~마산 구간이 복선 전철화됐고, 마산~부산은 2023년 개통할 예정이다. 하지만 목포 임성~보성 구간에는 이제야 철길이 놓이고 있고, 그나마 단선이다. 전라선 KTX 익산~여수 구간도 시속 120㎞의 '반쪽 고속철'에 머물고 있다.

최근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는 연간 2700만 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전라선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조속한 개선이 절실하다. 이들 사업 외에 광주~대구 간 달빛내륙철도와 목포~군산을 잇는 서해안철도 건설 등도 철도 분야의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건설할 철도망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내년 4월 확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경제성만을 따진다면 낙후된 호남은 영남에 계속 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소외 지역을 배려하고 불균형을 바로잡는 국토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투자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도 및 지역 정치권은 정부가 이런 점을 감안해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철도망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불법 도박 '카지노바' 단속 속수무책이라니

광주 도심 곳곳에 '카지노바'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카지노바란 카지노 형태의 술집을 말한다. 일반음식점과 마찬가지로 술과 안주를 팔지만 게임테이블이 설치돼 있어 일종의 도박이 가능하다. 광주시 상무지구, 용봉동, 첨단 상업지구 등에 몰려 있다.

카지노바 내부에 들어가 보면 카드 게임을 떠올릴 수 있는 그림과 도박 용어가 빼곡히 적힌 간판을 볼 수 있다. 업소에서는 손님 1인당 10만 원을 선불로 받고 그만큼 칩을 나눠 준다. 1인당 6만 원씩의 '입장료'를 선불로 받는 업소도 있다. 칩을 모두 잃으면 1게임당 한 번에 최대 2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현금이 아닌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교환할 수 있다. 누가 봐도 사행성 도박임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업소들이 대부분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한 후 불법으로 홀덤 등의 게임테이블을 설치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사행행위를 조장할 수 있는 시설임에도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지 않는 데다 행정 당국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업소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고 일종의 경품으로만 교환하니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경찰은 칩을 현금이나 상품권으로 교환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단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고 한다.

'홀덤' 등을 하는 카지노바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박임이 분명하지만, 아직 관련 법규가 미흡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도박은 누구나 한 번 빠지면 중독되기가 쉽다는 점을 감안, 법규 보완 이전에도 최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사모 펀드

펀드는 크게 공모 펀드와 사모 펀드로 나뉜다. 투자금을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느냐 아니면 소수(보통 50인 이하)로부터 받느냐로 구분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펀드는 지금까지 두 번 열풍이 분 적이 있다. 1999년 현대증권이 내놓은 바이코리아 펀드에는 4개월 만에 10조 원이 모였고 설정액이 최고 18조 원까지 늘었다. 하지만 이듬해 IT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2007년에는 미래에셋이 인사이트 펀드를 출시해 순식간에 수조 원을 끌어모았다.

주식시장 호황을 타고 주식형 공모 펀드는 2008년 8월 134조 원까지 불어났다. 하지만 그해 9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자 펀드 손실이 속출했다. 두 번의 열풍이 손실로 이어지자 공모 펀드에 대한 인기도 시들해져 주식형 공모 펀드 설정액은 1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익률도 연평균 2.3%로 같은 기간 정기예금 금리(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틈새를 사모 펀드가 파고들었다. 2015년부터 지속된 규제 완화에 저금리 기조까지 더해지면서 사모 펀드 시장은 급성장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사모 펀드 규모는 402조 원으로 공모펀드 258조 원을 크게 앞질렀다. 그러나 사모 펀드는 커진 규모에 비해 불안전 판매에 대한 감독 부실과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가 대표적이다.

환매 중단으로 각각 1조6000억 원과 5000억 원의 피해를 입힌 두 사모 펀드가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금융 사기'에 불과하다는 여당의 주장에 '권력형 게이트'라는 야당의 주장이 맞서면서 연일 난타전이 계속된다. 펀드에 가입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펀드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명단이 떠돌고 있다.

부(富)의 양극화 시대, 사모 펀드는 어차피 돈 있는 '그들만의 리그'다. 가진 자들이 사모 펀드를 놓고 벌이는 '쩐의 전쟁'과 금품 로비를 지켜보는 서민들의 가슴만 찢어진다. "테스 형! 사모 펀드가 왜 이래. 왜 이리 구리지?"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